2020년도 제18회 가맹거래사 1차 국가자격시험

교 시	문제형별	시험시간	시 험 과 목
1교시	B	120분	1 경제법 2 민법 3 경영학

수험번호		성 명	

【 수험자 유의사항 】

1. **시험문제지 표지**와 시험문제지 내 **문제형별**의 **동일여부** 및 시험문제지의 **총면수, 문제번호 일련순서, 인쇄상태** 등을 확인하시고, 문제지 표지에 수험번호와 성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2. 답은 각 문제마다 요구하는 **가장 적합하거나 가까운 답 1개**만 선택하고, 답안카드 작성 시 시험문제지 **형별누락, 마킹착오**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**수험자에게 책임**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
3.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번까지 인쇄되어 있습니다. 답안 마킹 시에는 반드시 **시험문제지의 문제번호와 동일한 번호**에 마킹하여야 합니다.
4. **감독위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시험시간 종료 후 답안카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**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
5. 시험문제지는 시험 종료 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.

안내사항

1. 수험자는 QR코드를 통해 가답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**(※ 사전 설문조사 필수)**
2. 시험 합격자에게 **'합격축하 SMS(알림톡) 알림서비스'**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▲ 가답안 확인

- 수험자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-

HRDK 한국산업인력공단
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

제 1 과목 : 경제법

1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일정한 거래분야: 거래의 객체별·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

② 임원: 이사·대표이사·유한책임사원·감사나 상업사용인

③ 여신: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

④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: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·수량·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

⑤ 재판매가격유지행위: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

2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상품·용역의 수요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있다.

② 사업자는 제조업, 서비스업,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.

③ 의사와 같은 전문인도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.

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 해당할 수 없다.

⑤ 기본적 속성에 비영리적 특성이 있는 사립유치원연합회의 구성원도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.

3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가 아닌 것은?

① 상품의 판매를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

②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

③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

④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

⑤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

4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인 경우에만 해당할 수 있고, 수요자는 해당하지 않는다.

② 하나의 관련시장에서는 하나의 사업자만 인정될 수 있다.

③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시장점유율은 금액기준으로만 산정할 수 있다.

④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외에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,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.

⑤ 시장지배적사업자는 가격 결정에 대한 시장지위만으로 판단한다.

5.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? (A와 D만 계열회사 관계이다.)

주요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(연간 매출액)이 A는 45%(150억), B는 23%(70억), C는 7%(40억), D는 4%(15억), E는 6%(35억)이다.

① A, B, C ② A, B, D ③ A, B, E

④ A, B, D, E ⑤ A, B, C, D, E

6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②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.

③ 검찰총장은 이 법에 의한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의 인하, 당해 행위의 중지,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고발 요청이 있더라도,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을 수 있다.

7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연구·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여 인가될 수 있는 요건이 아닌 것은?

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긴요하며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경우

② 연구·기술개발에 소요되는 투자금액이 과다하여 한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

③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긴급히 필요한 경우

④ 연구·기술개발성과의 불확실에 따른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⑤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연구·기술개발의 효과가 클 경우

8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ㄱ. 산업합리화 ㄴ. 대기업의 경쟁력향상 ㄷ. 거래조건의 합리화

① ㄱ ② ㄱ, ㄴ ③ ㄱ, ㄷ ④ ㄴ, ㄷ ⑤ ㄱ, ㄴ, ㄷ

9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과징금 산정에 있어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.

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로 인해 사업자가 취득한 이익이 적은 경우 과징금을 낮게 부과할 수도 있다.

③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지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.

④ 과징금 산정에 있어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.

⑤ 사업자들이 공동행위를 위한 기본적 원칙에 합의를 하고 수회에 걸쳐 회합과 합의를 계속해온 경우에는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에 변경이 있더라도 위반행위는 하나로 보아야 한다.

10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구속조건부 거래에 관한 내용이다. ( )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?

(ㄱ):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(ㄴ):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

① ㄱ: 부당한 지원거래, ㄴ: 거래지역의 제한

② ㄱ: 차별적 취급거래, ㄴ: 거래지역의 제한

③ ㄱ: 배타조건부거래, ㄴ: 거래상대방의 제한

④ ㄱ: 차별적 취급거래, ㄴ: 거래상대방의 제한

⑤ ㄱ: 배타조건부거래, ㄴ: 거래지역의 제한

11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ㄱ. 이익제공강요	ㄴ. 부당염매	ㄷ. 구입강제
ㄹ. 판매목표강제	ㅁ. 인력의 부당유인·채용	

① ㄱ, ㄴ, ㄷ ② ㄱ, ㄴ, ㄹ ③ ㄱ, ㄷ, ㄹ ④ ㄴ, ㄷ, ㅁ ⑤ ㄴ, ㄹ, ㅁ

12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나 계열회사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.

②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규정은 공정한 거래를 현재 저해한 경우에만 해당한다.

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을 차별취급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경쟁규약을 정할 수 있다.

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·고시할 수 있다.

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규약의 제정을 요청할 수 있다.

13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별 행위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ㄱ. 거래강제 - 끼워팔기
ㄴ. 사업활동 방해 - 경영간섭
ㄷ. 부당한 지원행위 -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
ㄹ. 거래상 지위의 남용 - 판매목표강제
ㅁ. 경쟁사업자 배제 - 배타조건부거래

① ㄱ, ㄴ, ㄹ ② ㄱ, ㄴ, ㅁ ③ ㄱ, ㄷ, ㄹ ④ ㄴ, ㄷ, ㅁ ⑤ ㄷ, ㄹ, ㅁ

14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ㄱ. 대한의사협회
ㄴ. 종교 활동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
ㄷ.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

① ㄴ ② ㄱ, ㄴ ③ ㄱ, ㄷ ④ ㄴ, ㄷ ⑤ ㄱ, ㄴ, ㄷ

15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종업원도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는 사업자로 본다.

②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는 금지된다.

③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참가한 경우 사업자가 매출액이 없는 경우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④ 구성 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조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는 금지된다.

⑤ 사업자단체에게도 공동행위의 사전인가 제도가 인정된다.

16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최고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허용되지 않는다.

② 사업자단체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③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④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다.

17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사업자의 최저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용된다.

②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행위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.

③ 개개의 사업자 사이에 저작물에 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단체가 자유경쟁가격제도를 택하려는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.

④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증명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.

⑤ 공정거래위원회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는 상품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

18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에 관한 내용이다. ( )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?

> 대통령령이 정하는 (ㄱ)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품으로서 사업자가 당해상품에 대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(ㄴ)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① ㄱ: 상품, ㄴ: 사후 지정
② ㄱ: 저작물, ㄴ: 사후 지정
③ ㄱ: 용역, ㄴ: 미리 지정
④ ㄱ: 용역, ㄴ: 사후 지정
⑤ ㄱ: 저작물, ㄴ: 미리 지정

19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관한 내용이다. ( )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?

>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당해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, (ㄱ)을/를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, 당해사업자단체에 대하여 (ㄴ)원의 범위안에서 (ㄷ)을 부과할 수 있다.

① ㄱ: 시정권고, ㄴ: 3억, ㄷ: 이행강제금
② ㄱ: 시정권고, ㄴ: 3억, ㄷ: 과징금
③ ㄱ: 시정명령, ㄴ: 3억, ㄷ: 이행강제금
④ ㄱ: 시정명령, ㄴ: 5억, ㄷ: 과징금
⑤ ㄱ: 시정권고, ㄴ: 5억, ㄷ: 이행강제금

20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.
③ 위원장, 부위원장 및 다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.
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을 할 수 없다.
⑤ 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는 전원회의와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위원 3인으로 구성하는 소회의로 구분한다.

21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.

③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④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.

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,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.

22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와 관계행정기관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장구조 개선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
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 시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.

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·고시 등을 제정 또는 개정 시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통보없이 제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예규에는 시정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.

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23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(부과일에 해산되는 경우를 포함) 그 과징금을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지는 회사를 모두 고른 것은?

ㄱ. 분할되는 회사
ㄴ.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
ㄷ.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
ㄹ.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의 그 다른 회사

① ㄴ, ㄷ　② ㄱ, ㄴ, ㄷ　③ ㄱ, ㄴ, ㄹ　④ ㄱ, ㄷ, ㄹ　⑤ ㄴ, ㄷ, ㄹ

24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단체는 조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상태의 자발적 해소를 위하여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다.

②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미 접수된 동의의결절차는 진행된다.

③ 동의의결신청은 필요한 시정방안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④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.

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.

25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·의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심리와 의결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

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한다.

③ 전원회의는 재적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이 성립한다.

④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

⑤ 소회의는 재적의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성립한다.

26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함)에 의한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분쟁조정 신청서를 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
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협의회에 그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.

③ 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

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⑤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합의된 사항의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.

27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제71조(고발)에 관한 내용이다. ( )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?

> **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( ), ( ),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회적 파급효과,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,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.**

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, 한국은행장
② 금융감독원장, 조달청장
③ 감사원장, 조달청장
④ 금융감독원장, 한국소비자원장
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, 한국소비자원장

28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고의 또는 과실의 입증이 요구되지 않는다.

②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.

③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그 성질상 손해발생 여부와 손해액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.

④ 법원이 이 법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3배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는 당해 사업자의 재산상태를 고려 할 수 있다.

⑤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 하여 감면대상이 된 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그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된다.

29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징수금등의 납부의무자 결손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.

② 징수금등의 징수권에 대한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.

③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.

④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.

⑤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지방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.

30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위반 시 부과될 수 있는 벌금의 상한이 가장 높은 것은? (단, 양벌규정은 적용하지 않음)

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 조사 시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·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

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 조사 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

③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 조사 시 자료의 은닉 또는 위조를 한 자

④ 금지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자

⑤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 조사 시 허위의 감정을 한 자

31.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공정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.

②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이러한 약관조항을 작성·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.

③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.

④ 계약의 부수적 권리를 제한하는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.

⑤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.

32.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 약관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사업자단체는 약관 조항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.

②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경우에도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.

③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표준약관과 표준약관 표지를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사용하는 경우에 표준약관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 내용은 무효가 된다.

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심의·의결한 약관 조항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
⑤ 약관분쟁조정협의회가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다수 고객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.

33.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닌 것은?

①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

②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그 약관의 사본을 내주지 아니한 경우

③ 사업자가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

④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

⑤ 사업자가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경우

34.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무효인 약관 조항이 아닌 것은?

① 결혼 정보 제공업체에서 고객의 책임으로 인정하는 약관의 내용이 모호하여 약관의 해석상 고객의 책임 여부가 불분명한 약관 조항

② 여행사의 여행상품 관련 약관 중 천재지변에 의하여 여행이 불가능한 경우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이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약관 조항

③ 아파트 분양 계약서의 약관 내용 중 상당한 이유 없이 '견본주택의 사양은 시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'이라고 기재한 약관 조항

④ 방문 학습지 제공 서비스를 위해, '계약 기간 종료 후 고객의 다른 의사 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'는 내용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한 약관 조항

⑤ 상조 서비스 업체가 상당한 이유 없이 '수도권 외 고객에 대한 상조 서비스 제공은 지역내 타 업체에게 이관 할 수 있음'을 규정한 약관 조항

35.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와 약관의 해석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사업자는 고객이 일반적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반적 사항이라도 별도로 설명을 하여야 한다.

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지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.

④ 여객운송업, 전기·가스 및 수도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약관의 명시·설명의무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.

⑤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다르게 사업자와 고객이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 합의 사항이 약관보다 우선한다.

36.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분쟁조정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함)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협의회의 위원이 분쟁당사자의 출자자인 경우에는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에서 제척된다.

② 불공정한 약관조항으로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는 협의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.

③ 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조직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없다.

④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더라도 협의회는 조정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.

⑤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는 있지만, 스스로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제시할 수는 없다.

37.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적용범위와 불공정약관의 규제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행정관청에 시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은 하지 아니한다.

②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에도 이 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된다.

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실제 발생하지 않았으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도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·수정을 즉시 명령할 수 있다.

④ 불공정약관을 사용한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권고 없이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.

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을 사용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때 직접 조사 대상이 되지 않은 동종 업종의 다른 사업자에게도 동일한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를 권고할 수 있다.

38.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조항이 아닌 것은?

① 계약의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

②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

③ 사업자, 이행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

④ 채무의 이행에 있어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

⑤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

39.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명시·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.

②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준화·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③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의 요구가 없더라도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.

④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, 색채,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⑤ 사업자가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.

40.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.

②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하고, 이는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.

③ 사업자단체는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·개정안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,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.

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표준약관 표지를 정할 수 있다.

제 2 과목 : 민 법

41. 민법상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계약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.

②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.

③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.

④ 법인에게 명예권은 인정되지 않는다.

⑤ 사망신고로 비로소 사람은 권리능력을 잃는다.

42. 민법의 법원(法源)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민사(民事)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하고 조리가 없으면 관습법에 의한다.

② 민법 제1조의 민사에는 상사(商事)가 포함되지 않는다.

③ 관습법은 그 존부를 법원이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장·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.

④ 강행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.

⑤ 조례와 규칙은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.

43.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미성년자의 법률행위가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하에 행해진 경우,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의 제한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.

② 미성년자의 법률행위가 처분허락이 있는 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,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의 제한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.

③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.

④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가지지만,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 한하여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된다.

⑤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하여 선임된 특정후견인에게 법정대리권이 부여된 경우, 피특정후견인은 특정후견인의 동의 없이는 그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.

44.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법인 아닌 노동조합에 대하여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.

②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, 그 대표기관은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.

③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표기관이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.

④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도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.

⑤ 대표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해 법인이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, 법인은 대표기관의 선임·감독에 주의를 다하였다면 면책된다.

45.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.

② 주물을 처분할 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.

③ 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물건 상호 간의 관계뿐 아니라, 권리 상호 간에도 적용된다.

④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은 천연과실로 한다.

⑤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.

46.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.

② 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주무관청이 검사, 감독한다.

③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양도나 상속할 수 있다.

④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(遺贈)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⑤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.

47.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민법 제108조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ㄱ. 甲과 乙 사이에 통정허위표시로 생긴 채무를 보증하고 그 채무를 이행한 丙
ㄴ. 甲과 乙 사이의 가장매매계약에 기하여 甲이 乙에 대해 취득한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한 丙
ㄷ. 丙의 대리인 甲이 丙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허위로 양도한 경우의 丙

① ㄱ　② ㄴ　③ ㄱ, ㄴ　④ ㄱ, ㄷ　⑤ ㄴ, ㄷ

48. 의사표시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가 된다.

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③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.

④ 민법은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한다.

⑤ 당사자가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.

49.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상대방에 의한 대가적 의미의 재산관계의 출연이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되지 않는다.

② 당사자가 궁박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신분과 재산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.

③ 대리인에 의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,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,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.

④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.

⑤ 어떤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을 체결한 때가 아니라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.

50.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표의자가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.

② 표의자가 중대한 과실로 착오를 일으킨 경우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했다면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.

③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표의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.

④ 토지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할 수 없다.

⑤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

51.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대리인은 채무의 이행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.

②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.

③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소멸하지 않는다.

④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하여야 한다.

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없다.

52.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경매의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된다.

②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3년내에,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.

③ 매매대금의 과다로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.

④ 강박에 의한 증여의 의사표시가 일단 취소된 경우, 표의자는 그 취소로 무효가 된 증여의 의사표시를 강박상태에서 벗어난 뒤에도 추인할 수 없다.

⑤ 착오로 의사표시를 한 자가 사망한 경우,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.

53.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.

② 임의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.

③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.

④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.

⑤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.

54.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ㄱ. 기간을 시(時)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. **ㄴ. 2001년 6월 20일 오후 4시에 태어난 甲은 2020년 6월 21일 0시에 성년이 된다.** **ㄷ. 기간의 초일(初日)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(翌日)로부터 기산한다.**

① ㄱ　　② ㄴ　　③ ㄷ　　④ ㄱ, ㄴ　　⑤ ㄱ, ㄷ

55.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였으면 그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.

② 최고는 6개월내에 재판상의 청구, 파산절차참가, 화해를 위한 소환, 임의출석, 압류 또는 가압류,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.

③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그 이전에 승인을 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.

④ 압류,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.

⑤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 승계인이란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 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가리킨다.

56.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정지조건부로 권리가 취득되는 법률행위의 경우, 조건성취 사실은 조건성취로 권리가 취득되었음을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한다.

②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.

③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그 성취를 방해하였을 경우, 방해행위를 한 시점에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본다.

④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부에 표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하다.

⑤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,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.

57. 민법상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

② 공인회계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

③ 생산자가 판매한 생산물 대가

④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

⑤ 여관의 숙박료 채권

58.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甲의 토지에 대해 乙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후, 甲과 丙이 그 사실을 모른 채 매매계약을 하고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, 乙은 丙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.

②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는 부동산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.

③ 선의의 점유자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·경작함으로써 타인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할지라도 그 점유·경작으로 인한 이득을 그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.

④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.

⑤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간주한다.

59.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물권변동에 관하여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더라도 물권행위의 무인성으로 인하여 물권변동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.

② 우리 민법은 동산물권의 변동에 대해 공시의 원칙뿐만 아니라 공신의 원칙도 인정하고 있다.

③ 부동산 공유자가 공유지분을 포기하는 경우에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.

④ 甲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이 자신의 명의로 그 건물의 보존등기를 마친 경우, 乙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.

⑤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하더라도 점유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.

60. 총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ㄱ.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총유물의 처분에 관하여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, 그 대표자가 권한없이 행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대해서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있다.
ㄴ.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.
ㄷ. 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·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.
ㄹ. 총유물을 임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총유물의 처분이 아닌 관리행위에 해당한다.

① ㄱ, ㄴ　② ㄱ, ㄷ　③ ㄴ, ㄷ　④ ㄴ, ㄹ　⑤ ㄷ, ㄹ

61.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과실로 금전을 수취한 경우, 그 금전을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.

②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

③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 아닌 한,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,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.

④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⑤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

62.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.

② 지상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.

③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.

④ 지상권자가 1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.

⑤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.

63.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.

② 당사자는 설정계약에서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.

③ 저당권은 저당부동산의 멸실·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.

④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한다.

⑤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.

64.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,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.

② 청약자가 청약을 한 뒤에는 이를 임의로 철회하지 못한다.

③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.

④ 매도인의 청약에 대하여 매수인이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다면 그 매도인의 청약은 실효된다.

⑤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.

65. 쌍무계약에 있어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부동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매수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,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.

② 매매계약이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,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을 점유·사용함으로써 취득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③ 쌍무계약의 당사자는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규정과 다르게 약정할 수 없다.

④ 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은 채무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생긴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적용된다.

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,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.

66.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甲과 乙의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, 甲의 채무가 이행기에 도래하더라도 乙의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甲은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.

② 상대방의 채무는 변제기에 있지 않고 자기의 채무만이 변제기에 있는 당사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지 못한다.

③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대방의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.

④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다.

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일방의 계약채무가 손해배상채무로 변한 경우에도, 그 손해배상채무와 상대방의 원래의 채무 사이에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된다.

67.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려면 요약자와 낙약자 및 제3자가 계약당사자로서 채권계약을 성립시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.

② 제3자가 요약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하면, 제3자는 낙약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.

③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수익자는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④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.

⑤ 요약자는 수익자와의 사이에 대가관계가 부존재함을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.

68.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.

②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,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증여자뿐만 아니라 수증자도 이를 해제할 수 있다.

③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한 법률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증여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.

④ 부담부 증여에서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,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⑤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.

69. 민법상 규정된 전형계약이 아닌 것은?

① 여행계약 ② 증여계약 ③ 고용계약 ④ 소비자계약 ⑤ 화해계약

70.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계약의 합의해제는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.

②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계약이 합의해제 된 경우,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한다.

③ 채무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, 채권자는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④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.

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.

71.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.

②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.

③ 물건의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.

④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에 있어서 하자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.

⑤ 경매의 경우에는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.

72.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乙은 중도금 지급의 이행에 착수하였더라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② 계약의 해제를 위해 甲이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였으나 乙이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, 甲은 이를 공탁하여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③ 乙이 중도금의 이행기 전에 이미 그 이행에 착수하였다면 이를 불허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.

④ 乙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, 甲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⑤ 만약 乙이 약정한 매매계약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다면, 甲은 지급받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73.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차용물의 반환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, 차주는 언제든지 차용물과 같은 종류,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할 수 있다.

②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.

③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이전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.

④ 준소비대차는 기존채무를 소멸하게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므로 기존채무와 신채무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.

⑤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손해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.

74. 현상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현상광고에서 정한 행위의 완료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.

② 광고를 알지 못하고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.

③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동시 완료 여부를 묻지 않고 각각 균등한 비율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.

④ 우수현상광고에 있어 우수의 판정은 광고중에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한다.

⑤ 광고에 그 지정한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만료 전에도 광고를 철회할 수 있다.

75.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기간약정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, 통고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.

②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임차물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, 임대차 종료전이라도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

③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, 그 지상건물이 임대인에게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다면 임차인은 그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.

④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.

⑤ 건물소유를 위한 토지임대차가 등기되지 않은 경우,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더라도 그 임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.

76.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.

② 도급인은 하자보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③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.

④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⑤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, 수급인의 손해배상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.

77. 임대차계약에서 다음의 권리와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약정을 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

②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

③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

④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차인의 해지통고권

⑤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인의 해지권

78.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① 조합의 해산사유와 청산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.

②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.

③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.

④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.

⑤ 조합원으로서의 자격과 분리하여 지분권만을 처분할 수는 없다.

79.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위임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
②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.

③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도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.

④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위임은 종료한다.

⑤ 유상의 위임계약도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.

80. 화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ㄱ. 화해 당사자의 자격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.
ㄴ.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.
ㄷ.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착오가 있더라도 사기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

① ㄱ ② ㄴ ③ ㄱ, ㄴ ④ ㄱ, ㄷ ⑤ ㄴ, ㄷ

제 3 과목 : 경영학

81. 이익잉여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① 시설확장적립금 ② 차기이월이익잉여금 ③ 이익준비금

④ 주식발행초과금 ⑤ 임의적립금

82. 손익분기점(BEP)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총수익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매출액 수준을 의미한다.

② 비용은 변동비와 고정비로 분류해야 한다.

③ 공헌이익으로 고정비를 모두 충당할 경우의 매출액 수준이다.

④ 공헌이익률은 '1-변동비율'을 의미한다.

⑤ 매출총이익이 '0'이 되는 판매량 수준을 말한다.

83. (주)가맹은 상품매매 기업으로 20×1년도 재고자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. 이 회사가 선입선출법을 사용할 경우, 20×1년도 매출원가와 당기순이익은? (단, 다른 거래는 없다고 가정한다.)

구 분		수량	단가
1월 1일	기초재고	200개	2,000원 (구입가)
4월 20일	매입	240개	2,300원 (구입가)
6월 20일	매출	320개	3,000원 (판매가)
12월 15일	매입	280개	2,400원 (구입가)

① 매출원가 676,000원, 당기순이익 284,000원

② 매출원가 692,480원, 당기순이익 267,520원

③ 매출원가 712,000원, 당기순이익 248,000원

④ 매출원가 734,400원, 당기순이익 225,600원

⑤ 매출원가 792,000원, 당기순이익 168,000원

84. (주)가맹은 20×1년 1월 1일에 캐드용 기자재 1대를 구입하였다. 정률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는 경우 20×2년의 감가상각비는? (단, 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다.)

○ 취득원가: 20,000,000원	○ 내용연수: 7년
○ 잔존가치: 3,500,000원	○ 정 률: 20 %

① 2,560,000원 ② 3,000,000원 ③ 3,200,000원 ④ 4,000,000원 ⑤ 4,500,000원

85. 거래 8요소의 차변과 대변의 결합 관계로 옳은 것은?

① (차변)부채감소, (대변)자본감소
② (차변)자산증가, (대변)자본증가
③ (차변)자본증가, (대변)수익발생
④ (차변)비용발생, (대변)자산증가
⑤ (차변)자산감소, (대변)부채감소

86. (주)가맹은 20×1년도에 점포창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1억원을 다음과 같이 조달하였다. 가중평균자본비용(WACC)은?

자금조달 원천	금액	세후 자본비용
차입금	50,000,000원	4 %
보통주	30,000,000원	5 %
우선주	15,000,000원	6 %
사내유보금	5,000,000원	5 %
합계	100,000,000원	

① 2 % ② 3.5 % ③ 4.4 % ④ 4.65 % ⑤ 5 %

87. (주)가맹의 자본 항목이 다음과 같은 경우, 자본잉여금의 합계는?

○ 이익준비금: 80,000원	○ 자기주식: 100,000원
○ 주식할인발행차금: 200,000원	○ 주식발행초과금: 100,000원
○ 자기주식처분이익: 50,000원	○ 자기주식처분손실: 350,000원
○ 감자차익: 20,000원	

① 120,000원 ② 150,000원 ③ 170,000원 ④ 270,000원 ⑤ 370,000원

88. 재고자산의 단가평가 방법인 후입선출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단, 판매량이 급증하여 기초재고가 판매되는 재고청산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.)

①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세금이 줄어든다.

② 나중에 매입한 상품이 먼저 판매되는 것으로 가정한다.

③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기말재고자산금액은 시가인 현행원가에 근접한다.

④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기말재고자산금액이 선입선출법에 비해 낮게 평가된다.

⑤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재무적 관점에서 보수적인 회계처리 방법이다.

89. 촉진믹스(promotion mix)의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① 광고 ② 제품개발 ③ 공중관계(PR)

④ 판매촉진 ⑤ 인적판매

90. 신제품의 수용과 확산 시 다음 특성을 나타내는 집단은?

○ 소속된 집단에서 존경을 받는다. ○ 주로 사회에서 의견 선도자 내지 여론 주도자의 역할을 한다. ○ 전체 소비자 집단의 약 13.5%를 차지한다.

① 혁신층 ② 조기 수용층 ③ 조기 다수층 ④ 후기 다수층 ⑤ 최후 수용층

91. 어떤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소비자들 자신이 심리적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가격결정방법은?

① 단수가격 ② 관습가격 ③ 준거가격 ④ 명성가격 ⑤ 단계가격

92. 마케팅조사 자료수집 시 다음에 해당하는 표본추출방법은?

○ 추출된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할 수도 있다. ○ 표본 추출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절차가 간단하다. ○ 조사자나 면접원이 편리한 장소와 시간에 접촉하기 쉬운 대상들을 표본으로 추출한다.

① 편의표본추출 ② 군집표본추출 ③ 층화표본추출

④ 할당표본추출 ⑤ 판단표본추출

93. 소비재의 제품유형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?

ㅇ 제품 구매 시 타 제품과의 비교를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투입된다. ㅇ 지역별로 소수의 판매점을 통해 유통되는 선택적 유통경로전략이 유리하다. ㅇ 불특정 다수에 대한 광고와 특정 구매자 집단을 표적으로 하는 인적판매를 활용한다.

① 전문품 ② 소모품 ③ 자재와 부품 ④ 선매품 ⑤ 편의품

94. BCG 매트릭스 중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업단위는?

ㅇ 낮은 시장점유율과 낮은 시장성장률을 나타낸다. ㅇ 현금을 창출하지만 이익이 아주 적거나 손실이 발생한다. ㅇ 시장전망이 밝지 않아 가능한 빨리 철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
① star ② question mark ③ pig
④ dog ⑤ cash cow

95. 술, 담배, 해로운 약품 등 불건전한 수요를 제거하기 위한 마케팅 관리에 해당하는 것은?

① 전환적 마케팅 ② 재마케팅 ③ 동시화 마케팅
④ 디마케팅 ⑤ 카운터 마케팅

96. 투자안의 평가방법 중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현금흐름할인법을 모두 고른 것은?

ㄱ. 회수기간법	ㄴ. 내부수익률법	ㄷ. 순현가법
ㄹ. 회계적이익률법	ㅁ. 수익성지수법	

① ㄱ, ㄴ ② ㄱ, ㄷ, ㄹ ③ ㄴ, ㄷ, ㅁ ④ ㄴ, ㄹ, ㅁ ⑤ ㄷ, ㄹ, ㅁ

97. (주)가맹의 영업레버리지도(DOL)가 3이고 매출액 증가율이 5% 변동하는 경우, 영업이익 증가율은?

① 1% ② 5% ③ 10% ④ 15% ⑤ 25%

98. 선물거래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① 규제기관에 의한 공식적 규제 ② 1일 가격변동폭의 무제한
③ 거래대상, 단위 등 거래조건의 표준화 ④ 청산소의 거래이행 보증
⑤ 증거금의 납입과 유지

99. 인수대상 기업이 인수 위협을 느꼈을 때 가치가 높은 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인수 기업에게 적대적 M&A 추진동기를 상실하게 만드는 전략은?

① 왕관보석(crown jewel)
② 황금낙하산(golden parachute)
③ 백기사(white knight)
④ 극약처방(poison pill)
⑤ 역공개매수(counter tender offer)

100. (주)가맹의 매출액 48,000,000원, 매출채권 8,000,000원인 경우, 매출채권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평균기간은? (단, 매출채권은 매출액 발생연도의 기초와 기말의 평균값이며, 1년은 360일로 가정한다.)

① 40일 ② 45일 ③ 50일 ④ 55일 ⑤ 60일

101. 증권시장선(SML)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균형시장에서 자산의 체계적 위험(β)과 기대수익률은 선형관계를 갖는다.
② 어떠한 경우에도 과소 또는 과대평가된 증권은 존재할 수 없다.
③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위험은 분산투자에 의해 제거되지 않는 체계적 위험이다.
④ 개별 위험자산의 위험프리미엄은 시장위험프리미엄에 개별 위험자산의 베타(β)를 곱한 것이다.
⑤ 증권시장선상의 개별증권 가격은 증권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균형가격이다.

102. (주)가맹의 기말 현재 당기순이익 100억원, 발행주식수 200만주, 주가수익비율(PER)이 10인 경우 주가는? (단, 발행주식수는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말하며, 우선주 및 우선주배당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.)

① 30,000원 ② 35,000원 ③ 40,000원 ④ 45,000원 ⑤ 50,000원

103. 매슬로우(A. Maslow)의 욕구단계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상위단계의 욕구 충족이 좌절되면 그 보다 하위단계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한다.
② 하위단계욕구가 충족되었을 때, 상위단계욕구가 발생하게 된다.
③ 욕구결핍상태가 발생하게 되면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.
④ 인간의 욕구는 일련의 단계 내지 중요성에 따라 계층별로 배열할 수 있다.
⑤ 계층상 가장 상위단계의 욕구는 자아실현의 욕구이다.

104. 목표에 의한 관리(MBO)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맥그리거(D. McGreger)의 X이론에 바탕을 둔다.

② 보통 1년을 주기로 한 단기목표를 설정한다.

③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한다.

④ 조직의 목표 설정 시 구성원이 참여한다.

⑤ 목표달성 여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.

105. 동기부여의 과정이론에 해당하는 것은?

① 허즈버그(F. Herzberg)의 2요인이론

② 맥클레란드(D. McClelland)의 성취동기이론

③ 앨더퍼(C. Alderfer)의 ERG이론

④ 허시(P. Hersey)의 수명주기이론

⑤ 아담스(J. Adams)의 공정성이론

106. 균형성과표(BSC)에서 조직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4가지 주요 관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① 고객 관점 ② 재무적 관점 ③ 경쟁 관점

④ 내부 프로세스 관점 ⑤ 학습과 성장 관점

107.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직무평가란 공정한 임금구조 마련을 위해 직무의 상대적 가치평가를 하는 과정이다.

② 직무기술서는 직무에 대한 정보를 직무의 특성에 초점을 두고 작성한 문서이다.

③ 직무명세서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무담당자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인적요건을 기술한 문서이다.

④ 직무분석 방법에는 서열법, 점수법, 분류법이 있다.

⑤ 직무평가 방법에는 계량적과 비계량적 방법이 있다.

108. 리더십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경로-목표이론: 리더는 구성원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길을 제시해야 한다.

② 리더십 상황이론: 리더의 행위가 주어진 상황에 적합하면 리더십의 효과가 증가한다.

③ 리더-구성원 교환이론: 리더는 내집단-외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리더십을 발휘한다.

④ 리더십 특성이론: 리더가 지닌 신체적, 심리적, 성격적 특성 등에 따라 리더십의 효과가 달라진다.

⑤ 리더십 행동이론: 리더가 부하들에게 어떤 행동을 보이는 가에 따라 리더십의 효과가 달라진다.

109. 생산활동에서 수요예측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델파이법은 공개적으로 진행되며, 과반수로 결정하는 방법이다.

② 전문가패널법은 비공개적으로 진행되며, 만장일치제로 결정하는 방법이다.

③ 추세분석법, 자료유추법 등은 대표적 시계열분석기법에 해당한다.

④ 가중이동평균법은 단순이동평균법에 비해 환경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하게 된다.

⑤ 지수평활법은 비교적 장기 자료만으로 수요예측이 가능한 정성적기법이다.

110. 공급사슬관리(SCM)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공급사슬은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이다.

② 공급사슬관리란 공급사슬의 모든 활동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것이다.

③ 공급사슬 성과지표에는 배송성과와 환경성과 등이 있다.

④ 반응적 공급사슬은 수요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재고의 크기와 생산 능력의 위치를 설정함으로써 시장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.

⑤ 효율적 공급사슬의 목표는 영업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품의 물류 및 판매시간을 단축하는데 있다.

111. JIT 및 MRP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JIT는 재고를 자산으로 인식한다.

② JIT는 계획추진시스템이다.

③ MRP의 관리목표는 재고의 최소화이다.

④ JIT는 생산준비시간과 로트크기를 최소화 하고자 한다.

⑤ MRP는 무결점을 지향한다.

112. ISO에서 제정한 환경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표준규격은?

① ISO 5000 ② ISO 9000 ③ ISO 14000 ④ ISO 18000 ⑤ ISO 20000

113. 생산관리의 목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① 원가우위
② 고객만족을 통한 순현가 극대화
③ 품질우위
④ 납기준수 및 단축
⑤ 생산시스템 유연성 향상

114. 조직의 구매, 인적자원, 생산, 판매, 회계 활동 등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 것은?

① 경영정보시스템(MIS)
② 그룹의사결정지원시스템(GDSS)
③ 공급사슬관리시스템(SCM)
④ 고객관리시스템(CRM)
⑤ 전사적자원관리(ERP)

115. 생산의 표준화와 이동조립법(conveyor belt)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관리기법은?

① 테일러 시스템
② 포드 시스템
③ 간트 차트의 통계적 품질관리
④ 메어나드의 동작연구
⑤ 길브레스의 방법연구

116. 무선 PAN(personal area network) 기술로 휴대전화, 컴퓨터 및 다른 장치들 사이의 짧은 거리에서 신호를 전송해 주는 근거리 무선통신기술은?

① 블루투스(bluetooth)
② 와이브로(wibro)
③ 웹브라우저(web browser)
④ 텔레매틱스(telematics)
⑤ 소셜네트워킹(social networking)

117. Web 2.0의 4가지 규정적 특징이 아닌 것은?

① 상호작용성
② 실시간 사용자 통제
③ 사회적 참여 및 정보공유
④ 사용자 생성 콘텐츠(user-generated content)
⑤ 시맨틱 검색(semantic search)

118. 컴퓨터가 다룰 수 있는 데이터의 가장 작은 단위는?

① 비트(bit) ② 바이트(byte) ③ 필드(field)

④ 레코드(record) ⑤ 파일(file)

119. 클라우드 컴퓨팅(cloud computing)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비즈니스 데이터 및 시스템 보안에 대한 우려를 없애준다.

② 자신 소유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.

③ 사용자는 광대역 네트워크 통신망을 통해 클라우드에 접속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④ 필요한 IT 자원을 빌려 쓸 때 용량 등에 있어 확장성이 있다.

⑤ 인터넷을 통해 원격으로 제공되는 자원이나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다.

120. 인공지능 시스템 중 실제 세상 또는 상상 속의 행위를 모방한 컴퓨터 생성 시뮬레이션은?

① 인공신경망(artificial neutral network)

② 전문가시스템(expert system)

③ 지능형에이전트(intelligent agent)

④ 영상인식시스템(visionary recognition system)

⑤ 가상현실시스템(virtual reality system)

수험자 안내문

우리 공단은 수험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며, 다음과 같이 시험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.

첫째, 향후 시험일정을 알려드립니다.

□ 제1차 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: 6. 20.(토) 14:00 ~ 6. 26.(금) 18:00

□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: 7. 22.(수) 09:00

○ Q-Net 가맹거래사 홈페이지(60일간) 및 ARS 1666-0100(4일간)

□ 제2차 시험 원서접수 : 8. 24.(월) 09:00 ~ 8. 28.(금) 18:00

□ 제2차 시험 시험일자 : 9. 26.(토)

※ 제2차 시험 관련 법령 등을 적용해서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일정 연기 전 기존 제2차 시험 시행일(6.27.) 기준의 법령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함

□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 : 11. 25.(수)

둘째, 국가전문자격시험 신분확인 및 전자(통신)기기 관리·운영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. (2021. 1. 1. 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)

□ 시험당일 인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당해시험 정지(퇴실) 및 무효 처리

□ 전자·통신기기(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)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

□ 소지품 정리시간(수험자교육 시 휴대폰 등 전자기기 지정장소 제출) 이후 시험 중 전자·통신기기 등 소지불가 물품을 소지·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험 정지(퇴실) 및 무효(0점)처리

※ 자세한 사항은 Q-Net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셋째, 수험자의 응시편의를 위해 시험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.

□ 시험전일 18시부터 시험실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○ 시험실 사전 안내 메시지(알림톡) 발송 (수신 동의자에 한함)

○ Smart Q-finder(시험실 바로가기) 수험표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확인 또는 Q-Net 로그인 후 [마이페이지] - [원서접수내역]에서 확인

□ 시험 합격자에게 합격축하 알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(수신 동의자에 한함)

넷째, 기타 관련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.

(소관부처 및 자격증 발급) ☞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	(직업 및 취업정보) ☞ 워크넷	(코로나19 행동수칙) ☞ 질병관리본부
공정거래위원회	한국직업정보시스템	질병관리본부

고객 매우만족(10점 만점에 10점!)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.

HRDK 한국산업인력공단
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